

책을 열며 / 나의 젊은 날 그리고 평통사의 과제 / 김홍수

특집_토론회 지상중계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추어본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 / 이정희

특집_토론회 지상중계 /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고영대

인물 / 길위의 신부' 문정현, 대추리 주민 된 사연 / 김현진

인터뷰 /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를 모색하는 '카사하라 히카루' / 오미정

기고 / 이라크 파병 반대 양심선언 이등병 / 강철민

기고 / 평택 땅에 발을 담그고 / 주무늬

평화카페 / 아무도 모른다' / 김균열

표지사진 : 지난 4월 15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 농활이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서 사흘간 진행됐다. 평통사 유한경, 박종양 회원이 K-6 기지가 한눈에 보이는 황새울 들녘에서 모판을 나르고 있다.

사진 _ 김현진

| 여는 그림 |

"Lay off your arrogance!"

지난 4월 1일,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감액에 대한 불만으로 터져나온 캠프 미8군사령관의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을 감원하겠다"는 협박 발언은 우리 국민을 분노케했다.

정부간 협상조차도 묵살한 캠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앞에 모여서 이렇게 외쳤다.

"당신들의 오만함부터 버려라!"

사진·글 | 김현진

| 책을 열며 |

나의 젊은 날 그리고 평통사의 과제

공동대표 김 홍 수

나는 6. 25전쟁 중에 태어나 도처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후에도 젊은 날들을 남북간의 군사대결과 군사문화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보냈다. 되돌아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다.

내가 다닌 대학은 6·25전쟁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지방의 조그만 대학이었다. 감리교회가 1954년 이 대학을 세웠는데, 전쟁으로 파괴해진 농촌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대학이었다. 전쟁의 유산은 채플에서도 볼 수 있었다. 교정에는 한 미군 대위를 기념해서 세워진 예배당이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감리교 선교사의 아들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는데 1950년 9월 서울 녹번동 전투에서 사망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 직후에 이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가 전사한 외아들을 기억하며 캠퍼스에 예배당을 건립해주었다. 나는 그 채플에서 기도하고 신앙훈련을 받았다. 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 6. 25전쟁 때 작사된 이 찬송가는 우리가 전후의 혼란스런 역사적 상황에 ‘부름 받은 존재’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노래였다. 작사자 이호운 목사는 1958년부터 1969년까지 이 대학의 교수로, 학장으로 일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학 신학생들은 그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 그 때마다 가슴 속에 ‘부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셀 수 없이 각인시켰다.

전시에 지어진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전쟁 때문에 세워진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전쟁 희생자를 기념해서 세워진 채플에서 수 년 동안을 기도하면서도 전쟁과 평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나의 대학과 대학원 시절만 해도 민주주의와 독재 타도 같은 말은 일상 언어였으나 반전이나 군축, 평화운동 이야기는 대학 강의실이나 거리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20대의 세월을 허송했다.

내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눈뜬 것은 1980년대 초반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던 때였다. 그 때 나이 30대 초반이었다. 강의실을 드나들면서 게시판에 보니 동아리 모임에서 또는 교회에서 반전, 반핵 학습과 토론을 알리는 광고가 여기저기 붙어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반전, 반핵 광고들이었다. 그 무렵 미국교회와 대학에서는 반전, 반핵 문제가 자주 토론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내 눈에 들어 온 것이었다. 이런 토론을 이해하기 위해 ‘교회, 전쟁과 평화’라는 이름이 붙은 과목의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것이 전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첫 계기가 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전쟁에서 무력 사용에 반대하며 싸우기를 거부하는 평화주의 전통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심적 전쟁 반대라는 말도 처음 들었다. 유학생들은 가난했으나 배우는 기쁨은 컸다.

전사(戰士)로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도 이 시기였다. 어느 날 미국학생 룸메이트와 이

야기하던 중에 그가 “좌향좌”, “우향우” 같은 구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중쉬어”, “앞으로 나란히” 같은 말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는 대학 3학년 학생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수히 듣고 행동에 옮긴 “앞으로 짚러”, “뒤로 짚러” 같은 총검술 용어도 물론 이해하지 못했다. 나에게서는 충격이었다. 그 때 비로소 나는 전쟁터에서 태어났고, 전후의 혼란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십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았고 남북대결의 현장에서 그리고 군사정권 하에서 청춘을 보낸 분단국가의 젊은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부끄러운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한 것은 20대 후반까지도 전쟁이며 평화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다. 유감스럽게도 내 주위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선생님도 책도 없었다.

나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평통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 가는 길을 알리고 깨우쳐 주는 책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 글은 지난 4월 15일에 열린 ‘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정희 변호사와 고영대 연구위원의 발제문을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평화협력원 전봉근 원장, 중국 인민일보 서보강 기자, 참여연대 박정은 간사, 민주노동당 김판태 연구위원의 토론을 요약해서 같이 실었습니다. - 편집자 주

발 제 1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추어본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
이 정 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시설과 구역 제공의 한계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근거 규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1문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일미안보조약과는 달리 미군의 주둔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점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군이 한국내 주둔하여 한국과 관련없는 전쟁 또는 적대행위에 한국을 작전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어떤 목적으로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권은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으로서 최고성·독립성·단일불가분성·불가양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데 외국군의 주둔과 그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은 주권의 주요 구성요소인 영토고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국가 주권의 제약을 내포하는 조약 가운데서도 영토적 특권의 규제에 관한 조항의 해석에는 제한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경우 그 임무와 목적은 한정 해석되어야 한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상 공동방위행동의 범위

(1) 당사국에 대한 공격의 대응에 한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에 따른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협의한다고 정한 일미안전보장조약 제6조와 뚜렷이 구별된다.

또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임무이므로 미군의 한국 주둔 목적은 외부의 침공에 대응하는데 한정된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선제공격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둔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제1조가 “당사국은...(중략)...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고 하여 국제연합 헌장과 그 결의를 지킬 것을 선언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다.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다만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와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헌장 제51조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개의 국가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무력공격이 없이 단지 급박한 공격의 위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무력공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력공격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공격하는 예방적 자위권은 위 규정의 자위권의 범위 내에 들지 않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2) 3)

그런데 미국은 2002년 9월 20일 ‘국가안보전략’에서 사용가능한 핵을 포함하여 결정적이며 압도적인 타격능력을 사용하여 위협발생 또는 예견시 미국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예방 및 선제공격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 전을 감행하고 특히 2004년 8월에는 미2사단 병력 3,600명을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훈련시켜 이라크 전으로 바로 투입하였다. 한편 1973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 f항은, “다른 나라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국의 영토에서 다른 나라가 제3국에 공격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 국가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는 바,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이라크전을 준비하여 발진하도록 허용하고 놓아둔 대한민국의 행위는 이라크에 대한 침략행위가 된다.

그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작전계획 5027과 같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정식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외부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 대처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한 것에 위반되고 국제연합헌장의 집단적 자위권 규정에도 어긋난다.

(2) 활동범위가 태평양 지역까지 포함되는 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공동방위행동의 범위에 대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전문에서 태평양 지역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 지역을 넘어 태평양 지역으로 넓혀져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의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상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이라는 문구만 가지고는 한미 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넘어 한미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개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는 모자란다.

제3조에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니, 주한미군의 활동범위가 태평양으로 넓혀져 있는 근거라고 하기 어렵다.

1951년 8월 30일 서명된 아메리카합중국과 필리핀공화국 사이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도 태평양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같다. 그러나 1957년 8월 14일 조인된 세라노-볼렌 합의각서를 보더라도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자체만으로는 필리핀에 대

한 방어에서 더 나아간 동남아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여,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과 같이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행동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석에도 참작될 만 하다.

(3) 한국도 미국에 대하여 방위임무를 지는 지

한편 다시 제3조로 돌아가면, 이 문구만으로는 한미 양국이 서로의 방위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다만 한국은 태평양 지역 밖에서 미국이 위협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는 조약의 해석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하도록 하고,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수단으로 문맥(조약문의 전체-전문과 부속서를 포함,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협의 및 관련 문서), 조약의 해석 또는 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추후의 관행을 들고 있다. 또 제32조는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라는 한정 하에서 조약의 준비작업(조약의 교섭단계에서의 제안이나 의사록 등) 및 조약체결 시의 사정이라는 주관적 해석수단의 원용도 인정하였다.

이러한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약체결에 관련하여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합의의사록과 비준서 교환에 관한 공동성명의 내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의 양국간 관행, 조약 체결 시의 사정 등에 따르면, 제3조의 취지는, 휴전선 이남 지역 이외에서 타국이 대한민국 행정지배 하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응하여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태평양 지역 내의 미국 영토에 대한 타국의 공격 시 한국의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에도 한국이 미국방위임무를 지고 미국에 주둔하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조약체결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도, 한국이 미국이 침략을 당할 때 방위한다는 것은 예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한미양국의 공동행동의 범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행동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주한미군의 증강·철수와 배치변경 등은 미국의 일방적인 권리인 지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에게 ‘배비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한국의 영토나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권리이고 주한미군의 증강 또는 철수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한미군이 한국 외의 다른 지역의 작전에 참가하는데 대해 한국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고 하므로 주한미군병력의 배치나 장비의 배치 역시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제2조는 “당사국은.....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실행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거칠 것을 정하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둔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증강 또는 철수나 배치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함께 교환공문으로 협의할 사항을 한정하여 정하고 협의기관으로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두기로 한 일본이나 필리핀의 경우와 달리, 한미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의 협의의 대상이 구체적 또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적이 없다. 또 대한민국이 미국과 주한미군의 배비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하여 대한민국의 뜻을 관철시킨 일도 찾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주한미군의 배비에 대하여 미국이 추상적으로라도 협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대한민국의 협의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증강이나 전술핵무기 또는 최첨단공격장비의 반입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고려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이 증진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기운이 높아지는 것을 저해하고 한반도 정세를 다시 대결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문에 명시된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라는 주둔목적에도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의 해석상, 조약에 규정된 평화와 안전의 실현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증강이나 핵무기 반입 방침에 대하여도 협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3.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기동군 역할 부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충

(1)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 역할 부여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한미연합사의 작전변경을 지역 또는 전세계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은을 한국방어에서 세계분쟁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1990년대초 진행시켜 왔다. 1992년 한·미 국방장관은 세계적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 한미 동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인식 아래 21세기의 한미동맹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랜드 연구소와 한국 국방연구원이 2년 이상에 걸친 공동연구 끝에 1995년, 한미동맹은 장차 지역방어의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2004. 10. 22.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제4항은 “양 장관은 연합군사능력 증강, 군사임무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한 구상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세계안보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을 유념하면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고 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명시하여 거론하였다.

(2)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시설과 구역 제공의 근거

만일 이러한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활동할 임무를 부여받는다면, 이는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시설과 구역을 제공받은 것과 배치된다. 또 미군의 시설과 구역은 사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의 기본정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된다. 따라서 현행 상호방위조약 하에서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내 기지에서 이라크 침공에 투입될 병력의 훈련과 파견, 유류공급 등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아·태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대상이 어느 나라이건간에 선제공격 전략을 수행할 수 도 없다. 주한미군이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는다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을 제공받을 근거가 없게 된다.

그런데 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이전 등 주한미군의 재편은 미국의 GPR과 군사변환의 추진 과정에서 검토된 것이니,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에게 지역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는 시설과 구역 제공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의 문제점

미국이 합법적으로 주한미군에 지역군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제4조를 개정하여 일미안보조약과 같이 공동행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방위조약을 직접개정하지 않고 양국의 공동선언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조약의 해석을 변경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니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또는 선언 채택 시도는, 미국의 패권적 선제공격전략이 유지되는 한,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시설과 구역을 제공받는다면 이는 미국에게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행할 공격적 군사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 영토주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5조에 위반하여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도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정책과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의 효력 규정에 따라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연합 헌장에 부딪힐 수 있다.

(4) 사전협의절차 도입 주장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주한미군이 타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으로 사전협의로 주한미군의 활동을 통제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은 주한미군의 역내외 활동에 대하여 사전협의절차를 마련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이 현재의 조약 규정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사용하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증강과 철수, 작전수행, 배치전환 등에 대해 양국간에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사전협의’란 제2조에서 정한 협의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의 범위를 넘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결과가 벌어지는 것을 법령의 한계를 넘어 감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사전협의’로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지키고 미국이 일으키거나 관여하는 지역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한미관계의 경과나 일본의 예를 보아도 현실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사전협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주둔 목적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그 가운데 일부 행동만 제한하자는 전제에서 출발한 논의이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주둔목적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합헌적인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사전협의절차 도입은 주한미군 역할변경의 위법성과 위헌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4. 결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대단히 공격적인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군사행동을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서 벌이기 위한 것으로 핵과 첨단무기 및 장비의 증강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한반도의 평화가 더 멀어지고 한반도가 다른 나라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능성이 커질수록,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계속 주둔하도록 할 지 과연 무엇을 하도록 허용할 지에 대하여 헌법과 조약의 기본 정신에 따른 엄밀한 재평가가 시급히 필요하다.

각주

- 1) 김현정,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의 미국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7호(외교통상부 조직국 2004.), 제166쪽
- 2) 최승환도 인권과 정의 제337호(대한변호사협회, 2004. 9), 제48쪽에서, “미국이 기존의 전통적인 실정국제법상 자위군 개념을 초월해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예방적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예방적 자위권에 입각한 미국의 군사전략 및 군사무력 사용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한다.
- 3) 예방적 자위권이 부인된 예로는, 이스라엘이 1981년 6월 7일, 당시 건축 중이던 이라크 핵원자로 타무즈 I 에 대한 폭격의 근거로 예방적 자위권을 주장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군사적 예방조치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발 제 2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글을 시작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지금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훨씬 뛰어넘어 첨예한 전쟁 위기를 만성적으로 조장하게 될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기동군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주한미군 2사단 예하의 2여단 3,600여 명을 이라크로 파견하였고1) 10월에는 주한미군 헌병 70명과 항공 정비사 20명을 이라크로 파견하였다. 이어 미국은 올 1월 350명의 주한미군과 8대의 헬기를 서남아시아의 쓰나미 피해 지역으로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합참에 통보하였고2), 2월에는 주한미군 정보부대 병력 50명을 이라크로 파견함으로써 한국 당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없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주한미군 지역 역할 수행 대비책’3) 이 밝힌 주한미군의 이른바 저강도, 중강도 등의 투입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 위주의 단순 보도에 그칠 뿐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가져올 엄청난 국가적, 민족적 후과에 대한 심층 보도에는 매우 인색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피해 이를 기정사실화해 나가려는 미국의 의도를 방조하는 듯하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최종 합의4)를 강제해 내어 아무런 제약 없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시행해 나가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실현과 통일 과정에 우리 국민과 민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굴레가 덧씌워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문제점과 배경 등을 살펴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 사회진영의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이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것은?

1)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의미와 배경 및 역사적 논의 과정

①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의미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문자 그대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주한미군 작전범위의 전 세계적인 확대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는,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 분쟁 등에 개입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그 동안 대소, 대북 방어를 위해 남한에 고정 배치되어 있던 미군이 자신들

의 필요에 따라 전 세계로 자유롭게 이동 투입되는 (신속)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군사전략적 배경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부시 정권의 신군사전략과 군사변환 및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부시 정권은 9·11 사태 직후인 2001년 9월 말에 발표한 QDR과 2002년 5월에 발표한 ‘방어계획지침’에서 1-4-2-1이라는 신 군사전략을 정식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 우위, 정밀 타격, 군사력 신속 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작전·무기·조직 일체의 군사변환과 냉전시대의 ‘불박이군’에서 벗어나 세계 어디로든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오산·평택, 대구·부산 두 곳을 허브 기지로 하는 재배치와 2005년까지 2사단의 미래형 사단으로의 전환⁵⁾ 등을 통해 입지나 전력 면에서 아·태 기동군의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미 양국이 FOTA 예비회의(2003. 2)6), 1차 회의(2003. 4), 2차 회의(2003. 7)에서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에 합의한 것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 하였다”는 2004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의 합의는 이러한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군사변환 및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③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둘러싼 역사적 논의 과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한미 양국간에 논의되어 왔다. 냉전 해체로 한미동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자 한미 당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이에 따른 아·태 지역의 억제와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대안으로 모색해⁷⁾ 왔다.

이러한 한미 당국의 의지는 비록 포괄적인 차원이지만 90년대를 통해 줄곧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에 반영되었다. 1990~1994년 사이 공동 성명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미간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한국이 한국 방위에 대하여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방위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순조롭게 전환”(1993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80년 대, 90년 대 초 공동 성명은 주로 “계속 주둔”을 강조해 온 반면 1993~1997년 공동 성명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억제와 동북아 지역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1993년)였다고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1993년부터 공동 성명은 동북아 지역으로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함께 한반도 안보의 의의를 기존의 동북아 지역에서 아·태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90년대 전반의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 구상’(1990년) 상의 주한미군 2단계 감축안의 유보(1992년), 10만 미군의 아시아 전진배치를 강조한 90년대 중반의 ‘동아시아 전략 보고’(1995) 등 미국의 대 아시아 군사정책의 변화 속에서 구체화, 현실화하지 못하였다가 부시 정권의 신 군사전략 채택과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④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실과 바늘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필연적으로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강제한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한국 방위의 경우 한국군이 주된 임무를 맡고 주한미군이 이를 지원하며, 아·태 지역 방위의 경우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2차 FOTA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 롤리스 부차관보가 “전체적인 과정이 종료되면 90%의 한반도 방어 위주가 지역 방어와의 공통 영역이 85~90% 교차한다”⁸⁾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강제하게 되는 것은 우선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위 주한미군의 ‘지역 안정’이라는 역할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 아·태 지역에서의 주한미군의 작전을 미군만의 과제로 치부하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여기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강제하게 되는 것은 또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아·태 지역으로 확대 왜곡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⁹⁾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작전 시 한국군과의 공동 작전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피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인정하는 것, 곧 아·태 지역에서의 주한미군의 작전 명분과 범위의 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또한 한국군도 아·태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계획과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한다. 이는 곧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에서 미군의 작전계획과 지휘체계에 한국군이 직, 간접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따른 한국군의 작전범위 확대의 불가피성은 우리 국방당국자들의 인식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방부의 ‘주한미군 지역 역할 수행 대비책’¹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파견 범위 및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는 한미 양국이 동북아 평화유지군 기능을 수행하면서 나아가 전 세계적인 군사 소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¹¹⁾이라는 작년 5월 캠벨 미8군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한국군의 역할 확대로 이어지리라는 징후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 부대가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밑에 미군 지원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대미 지원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28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해군수송지원단은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공군수송지원단은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구역 내에서 미군물자 수송 및 병력 수송을 담당하였다.¹²⁾

한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강제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입증된다. 주일미군의 아·태 지역으로의 작전범위 확대는 이를 천명한 ‘미일안보공동선언’(1996년) 이래로 ‘신가이드라인’(1997년), ‘주변사태법’(1999년), ‘테러대책특조법’(2002년), ‘유사입법’(2003년) 등을 통해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총동원체제와 다를 바 없는 일본 정부 및 지자체와 자위대의 주일미군 지원을 담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맞춰 한국군을 동북아 지역 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이미 90년대부터 드러나고 있다. 1997년 SCM 공동 성명이 “한반도 내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민주적 가치¹³⁾와 안보이익을 계속 공유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한미동맹의 장기적 전망을 처음으로 민주적 가치에서 찾은 데 이어 1999년 공동 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힘으로써 한국군도 동북아 지역으로 작전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공동 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동북아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힘으로써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작전범위 확대가 마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양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국군의 작전 범위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인식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로 이어진다.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은 지역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예비회담에서의 한미 간의 합의는 한국군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아·태 지역으로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아·태 작전 지원을 위해 동원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은 90년 대 초부터 한반도 안보 의의의 아·태 지역으로의 확장, 한국 방위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를 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통해 노리는 것은?

① 나토 및 미일동맹의 퇴행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통해서 노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세계패권 전략의 유지, 강화다.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으로 지구적 차원의 간섭과 개입의 명분을 상실한 미국은 탈냉전 이후 빈발해진 국지적 차원의 인종·종족·종교·영토 분쟁과 인권, 대량살상무기, 대테러 전쟁 등을 구실로 새로운 간섭과 개입 정책을 구사해 왔다.

미국은 나토와 미일동맹을 탈냉전 이후 세계패권 전략을 구사하는 데서 중심 축으로 삼기 위해 방어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기동군을 창설하는 등 침략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해 왔다.

나토는 1991년 로마 정상회담과 1999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각각 신전략개념을 채택하여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지역에 개입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에까지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나토의 개입은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을 뛰어넘은 선제 무력행사이자 북대서양조약 제 6조(방어의 지역적 범위)를 위반한 불법적인 역외작전이었다.¹⁴⁾ 특히 코소보 내전 개입은 유엔 결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그 침략적 성격이 뚜렷하였다.

미일 양국도 1996년에 미일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극동지역으로 한정되었던 주일미군의 작전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일 양국은 미일동맹의 활동범위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본래 임무화’¹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을 올해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토의 경우 유럽의 독자성을 강화하려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나라들과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미일동맹은 미국의 등에 업혀 군국주의적 팽창을 꾀하는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역외작전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전쟁과 군대(육·해·공군과 기타 전력)의 보유를 포기하고 교전권(무력 위협 또는 무력행사)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다그치고 있다.

② 중국 포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

탈냉전 이후 군사전략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태 지역으로 옮겨 온 미국은 소련을 대신할 잠재 적국(16)으로 줄곧 중국을 지목해 왔다. 그러나 클린턴 정권은 물론 1기 부시 정권도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또한 보다 노골적으로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중국 포위 전략(17)을 구사해 나가고 있다.

이른바 중동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북아에 이르는 ‘불안정한 활꼴(unstable arc)’도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다.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및 이와 연계된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미군 주둔,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 강화, 필리핀·태국 등과의 군사훈련 실시 등은 이와 같은 ‘불안정한 활꼴’에 위치한 국가들을 군사적 통제 하에 둠으로써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장기적 포석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으로 주한·주일 미군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배치는 한걸 같이 미국의 중국 포위를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이러한 대 중국 포위 전략에의 전력 투입을 1차적인 과제로 할 것이며, 태평양이나 중동지역으로의 전력 투입은 2차적인 과제로 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군사변환, 무기체계 등과 향후 전략 등도 그 중심은 모두 중국 포위 전략에 맞춰지게 될 것이며, 한국군의 군사임무 전환과 무기체계 도입 등도 상당 부분 주한미군의 대 중국 포위 전략에 종속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중국 포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점차 중국을 위협 세력으로 적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미일동맹의 최근의 변화 속에서도 확인된다.

미일 양국이 금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회의, 이른바 2+2 회의를 열어 양안문제의 개입을 양국의 공동 전략 목표의 하나로 채택한 것은 대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미일동맹의 전략적 지향을 명백히 보여준다. 미일 양국이 그 동안 중국 위협론이나 양안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미일 공동 전략 목표 선언의 의미는 이전과 한 획을 그을 만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올 8월 발표될 미국의 QDR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서 중국 위협론과 포위 전략은 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대중국 포위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일 미군과 자위대와 함께 주한미군, 한국군이 대 중국 포위 전략의 최 첨병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가져올 문제점

미국이 장기적인 대 중국 포위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지향을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서 퇴행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는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아·태 기동군화 되어 양안문제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적국이 되어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 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개입을 위한 침략기기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준전시체제와 다를 바 없는 인적, 물적 동원 체제를 갖춘 병참기지로 전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①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의 격화와 만성적 전쟁 위기

우선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장비가 밀집되어 있고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동북아에서 한·미·일·대만과 북·중 사이의 무한대의 군비경쟁과 그에 따른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켜 항상적인 전쟁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압도적인 군사비와 군사력을 갖춘 한·미·일·대만은 상대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MD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최첨단 고성능 공격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로 대중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게 되면 최근 몇 년간 10% 안팎의 군사비 증액과 세계 1~2위의 무기도입액을 기록하며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지만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군사력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 동북아는 헤어내기 어려운 군비경쟁에 빠져 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군비경쟁은 중일, 한일, 러일 간 영토 분쟁 등과 맞물려 이미 90년대에 북핵문제로 수차례나 미국의 대북 전쟁 도발 위기를 겪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첨예한 전쟁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군이 아·태 기동군화 되어 양안관계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부분적이지만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에 맞서 산둥반도와 서해에서 러시아와 ‘우의 2005’로 명명된 합동군사훈련을 갖기로 하였다.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갖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육·해·공군과 공수부대, 해병대까지 참여하는 이 훈련은 IL-76 수송기로 훈련지역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TU-22M3 중거리 폭격기로 가상 목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Su-27SM 전폭기로 지상부대를 폭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주한미군, 일본과 주일미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상징(18)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의 편입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또한 한국군의 대미 군사적 종속을 고착, 심화시키고, 미국 주도의 명실상부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똑같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부대이지만 전력구조나 지휘체제가 서로 다르다. 주한미군의 경우 육군전력이 중심을 이루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시 육군에 대한 지휘권만 행사한다. 주일미군의 경우 해·공군 전력이 중심을 이루며 주일미군 사령관은 평시 공군에 대한 지휘권만 행사한다. 주한미군이 아·태 지역 작전에 투입되어 주일미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면 육해공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미군의 통합 지휘체제가 이뤄지게 되고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또한 이러한 미군의 통합지휘 체제 하에서 작전하게 된다.

또한 주일미군과 자위대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군사작전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투입되면 한·미·일 간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계획, 지휘체제, 조직, 무기체계 등이 갖춰지게 될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일본 자마의 주일 미 육군 사령부로 아·태 지역 전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미 육군 1군단 사령부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19) 이 1군단 사령부가 주한 미2사단을 포함하여 아·태 지역 미 육군을 통합 지휘하거나 미국이 이를 중심으로 동북아 사령부를 건설하여 일본을 아·태 지역의 전력투사거점(PPH)으로 삼는다면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벗어나

는 아시아 태평양을 범위로 하는 광역 작전의 경우 C4ISR, 무기체계, 병참 등 종합적인 작전수행력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미군과 자위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군과 자위대에 대한 한국군의 종속은 보다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군과 자위대의 군사 관계도 단순 교류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며 협동 단계-연합작전 이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1990년에 한국군과 자위대는 방공식별권(ADIZ)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매년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있고, 1998년 이후 한일 외무·국방 관계관이 함께 참가하는 한일안보정책협의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이밖에도 국방정책실무회의, 정보본부와 각 군 간의 정보교류회의 및 방공실무회의 등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1999년에는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 간,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간에 긴급연락채널이 설치되었으며, 합참·통합막료회의 간 부장급 회의와 해군 대 해군 회의가 열리는 등 군사적 대화 채널이 다양화되었다. 또한 한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의장 간 상호교환 방문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공동 해상수색과 구조를 명목으로 한 공동 군사훈련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²⁰⁾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의 수준으로까지 높이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에 따라 추진되어 온 아·태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결합되게 되면 한국군과 자위대의 관계 또한 협동단계에서 현재의 미일간의 군사지휘체제와 같이 내용적으로 사실상의 연합단계로 발전²¹⁾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전면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의 형성을 우려하는 것이 결코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③ 대중 침략의 전초기지 및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 주둔 허용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우리나라를 대중 포위를 위한 침략기지²²⁾로 전략시키며, 미국은 한층 더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평택과 대구·부산을 허브 기지로 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주일미군의 재배치와 함께 대중 포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 용산기지와 2사단의 평택 이전도 1차적으로 공군기지와 항구를 동시에 갖춘 평택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이용하여 대중 작전의 기동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천 문학산, 새만금 간척지, 군산 미공군기지, 광주 미공군기지 등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부대를 배치했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대중 포위 전략을 위한 서해안 벨트 형성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북쪽을 겨냥한 실전 연습장으로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갖춘 매항리 폭격장을 반납하고 군산 앞바다에 위치한 직도를 새로운 폭격 연습장으로 선택한 것도 직도가 대중 포위 전략과 연동하여 중국을 상정한 실전 연습장으로서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갖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해군이 재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화순항 건설도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의 역외 작전과 불가분의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군 스스로 밝히고 있는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 보호와 남방 항로 확보”를 위한 화순항 건립 명분에서 이미 주한미군의 아·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며 한국 해군이 도입하고 있는 KDX-II, KDX-III 구축함과 1, 800톤 이상의 잠수함 등과 같은 무기체계가 집중 배치될 곳이 다른 아닌 화순항이 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지역 분쟁에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동북아 지역 분쟁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전력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 중국 포위를 위해서나 동북아 분쟁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나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더욱 강한 요구로 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장기 주둔의 이해가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 하면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는 아·태 지역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광역사령부로 전환될 가능성²³⁾이 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도 아·태 지역의 작전 수행에서 미군의 주도적 지위를 보장해 주도록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 설령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처럼 각종 기구나 제도²⁴⁾를 두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할 것임은 물론이다.

올해 3월 8일 라포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이 강화²⁵⁾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평시의 작전·기획·수행을 위해 유엔사를 구성하고 있는 15개 동맹국의 힘을 결속할 수 있는 진정한 다국적 참모진을 구성²⁶⁾할 것”이라고 증언²⁷⁾한 것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및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인 유엔사의 역할을 주한미군이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나온 까닭은 주한미군이 아·태 기동군화 되면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넘김으로써 미국이 한미연합사 해체 뒤에도 계속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대북 개입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추정된다.²⁸⁾

이러한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미국의 대북 군사적 대응은 유엔사를 중심으로, 아·태 지역 작전은 한미 광역사령부—지휘체계야 어떻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원적 구조를 띠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강고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④ 주한미군의 해외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또한 한국을 주한미군의 병참기지로 전락시킨다. 주한미군이 아·태 지역에서 작전을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군의 병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주한미군이 아·태 지역에서 작전하기 위해 필요한 탄약이나 연료, 식량이나 식수 등의 물자를 한국 정부의 협력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며, 또한 작전지역까지 수송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과 정비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일 양국은 1996년에 일미안보조약의 적용범위를 아·태 지역으로 확대한 ‘일미안보선언’을 채택한 이래로 1997년에는 일미신가이드라인, 1999년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여 주변사태 때 일본 정부와 지자체, 자위대가 아·태 지역에서의 주일미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일본이 주일미군에 지원해 주어야 할 항목은 시설, 보급, 수송, 정비, 위생, 경비, 통신 등의 분야에서 군대, 민간시설을 비롯하여 급수, 급전, 병원 시설 제공이나 심지어 오·폐수 처리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운용했던 국가동원체제와 다를 바 없는 주일미군의 아·태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8년 ‘일미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²⁹⁾을 개정하여 주변사태 즉 전시에도 자위대의 물품과 용역을 미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도 1988년 미국과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전·평시 병참지

원을 법적으로 보장해 왔다. 이 협정은 적용범위가 한반도와 북미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4년 2월 미국의 강압에 의한 협정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세계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에 대한 물 공급과 물자 수송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한국의 굴복을 받아냈다. 미국이 이 같이 비열한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향후 본격화될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작전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상호지원 품목에 항공수송 이용과 비살상 군사무기 임차를 추가시킨 것도 한국의 병참기지화를 보다 전면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군수지원협정과 별도로 한국은 1991년에 미국과 전시지원협정(WHNS)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우리나라에 전개될 미국의 증원부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민간자원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국방 정책의 변화 강요와 군사비 부담의 급등

그 동안 한국군은 북한 점령까지를 포함하는 작전계획 5027을 수행할 수 있는 육군 위주의 과도한 병력을 보유하고 첨단 고성능 공격무기를 도입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경제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부담해 왔다.

이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이에 따른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한국군의 아·태 지역의 작전수행을 위한 작전과 군사변환³⁰⁾, 무기체계를 뒷받침하는 국방정책을 강제할 것이며³¹⁾, 여기에 소요될 군사비도 기존의 한국 방위를 위주로 한 지금까지의 군사비 소요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동원한, 더욱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다 무모한 반인권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드는 추가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우리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으로의 군사임무 전환 -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과 아·태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에 소요될 고성능 대형 무기도입 등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광역 작전에 필요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작전반경이 큰 첨단 고성능 전투기 도입이나 대양해군 혹은 이른바 Sea Lane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형 함정 도입 계획들은 대북 방어가 아니라 한국군의 아·태 지역 작전을 겨냥한 것이다.

국방부가 2005~2009년 중기계획 기간 중 무려 130조 원의 국방예산 확보를 목표로 잡고 이중 전력투자비 비중을 38.6%(약 5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다름 아닌 이러한 소요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액수는 한 마디로 2005년도 정부예산(일반회계) 134조 원을 통째로 5년 동안 국방비로 나누어 쓰겠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으며, 생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⑥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경제 협력체 형성을 통한 협력 안보 저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로 동북아가 군비증강과 군사적 대결의 격화로 상시적인 전쟁 위기에 빠져 든다면 남북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 민족의 노력은 한층 요원한 과제로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도 훨씬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동북아가 상시적인 전쟁 위기에 빠져 든다는 것은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안보에 기초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공리·공영에 기초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도모해 나가기가 한층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고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동안 한반도 분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챙겨 왔던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더욱 고착시키거나 북의 체제 전복과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데서 또 동북아시아 나라들을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가는 데서 보다 확실한 칼자루를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의 문제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작년 11월 13일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지 4개월 만의 일로 이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기정사실화 해 나가고 있는 미국의 행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의 외통부와 국방부 관료들의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의 발언에 주를 달았다. 이 관계자의 말이 노 대통령 발언의 참 뜻을 정확히 전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주장은 우리 정부가 동의해 준다면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된다. 만일 그의 말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제한적 수용 입장이라면 한국 정부의 방어선은 사실상 이미 무너진 것과 다를 바 없다.

1)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전제로 하는 사전동의제는 우리나라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는 꼴－주한미군의 역외 작전은 원천 봉쇄해야!

① 동북아 분쟁의 성격 상 우리가 사전동의해 줄 분쟁이란 있을 수 없어!

만약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어떤 분쟁도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분쟁으로 될 것이다. 이는 분쟁에 따라 우리에게 유·불리하거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정부 당국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듯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되기 때문에 마땅히 원천 봉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사전동의제를 주한미군의 동북아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분쟁은 그 어떤 분쟁도 주한미군이 개입해도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전동의해 줄 만한 분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동의제는 전제부터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더욱이 사전동의제는 현재의 동북아 안보 지형 상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전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의 조건 및 의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곧 사전동의제는 주한미군이 아·태 기동군으로 되는 이상 그들의 역외 활동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분쟁의 성격을 가려 어떤 분쟁은 출동을 허용하고 어떤 분쟁은 불허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동북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이 바로 주일·주한미군이기에 때문에, 설령 저강도 개입(32)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중강도, 고강도 개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 동북아 정세다. 또한 특정 분쟁에 개입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전례가 되어 다른 분쟁에 대한 개입 허용으로 이어지기가 십상이다.

② 주한미군은 얼마든지 사전동의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이런 조건에서 한미 양국의 합의 하에 사전동의제가 도입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도입된다 해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에의 개입을 막는 안전판으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전동의제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한국 정부의 동의를 강제해 낼 수 있다. 정부가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한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미국의 압력에 사전동의제는 무력해지고 말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의 사전동의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북아 개입을 기도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분쟁 지역에 직접 파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반발을 감안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순환배치 등을 명분 삼아 일단 일본, 괌 등으로 파견한 다음 분쟁 지역으로 파견하거나 공해 상으로 나가 분쟁 지역으로 파견하는 모양새를 갖추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동북아 이외 지역을 경유해서 동북아로 파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전동의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에의 개입을 막는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로서의 역할을 일단 인정하는 순간 그 때부터 주한미군에게는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③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한반도 입·출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이 사전동의제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 수 있는 주된 원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전제로 하되 동북아 분쟁에의 개입에 한해서만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게 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의 사전동의제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입·출입을 자유롭게 보장해주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있다. 한반도를 자유롭게 입·출입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갖가지의 다른 명분을 들어 한반도 밖으로 출동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동북아 개입을 막아보겠다는 사전동의제 자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전동의제라는 절충적이고 절차적인 방안만을 가지고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에의 개입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기정사실로 인정해주는 것이자 한반도 방위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입·출입 권한만 확대 보장(33)해 주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에의 개입을 막는 길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을 원천 봉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작전에 대한 사전동의제란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에의 개입을 막기에는 턱없이 취약한 장치에 불과하며, 위험한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2) 지금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전면 개·폐로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우리나라가 전면 통제해야 할 때!

동북아 지역의 분쟁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를 개정하거나 폐기하여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한국 정부의 통제 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정부와의 최종 합의도 없이 주한미군은 이미 이라크 등의 역외 지역에 대한 파병을 단행함으로써 자신들에게 거추장스러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무력화시키는, 곧 불법적인 입·출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막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를 개·폐하여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한국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전면 공세를 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투쟁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매달리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관리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은 미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 협상에서, 미 국무부가 밝힌 대로, 미국이 목표를 초과 달성³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이해를 배려했던 자들이 아닌가?

물론 이에 대해 현실성이 있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미국의 호전성에 속수무책으로 내맡기자는 것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백해무익한 한미동맹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허구적인 북한 위협론의 포로가 되어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비록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지만 그 적용범위를 지킨다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저지하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를 개정하여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한국 정부의 규제 하에 두는 것은 실현 가능한 과제다.

최근 미일 양국은 미 1군단 사령부의 자마 이전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1군단 사령부의 작전 범위를 아·태 지역으로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극동지역으로 제한하려는 일본이 갈등을 빚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이 관철되었고, 미국은 이를 수용하였다. 적용범위가 아·태 지역인 미일안보선언과 신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군의 작전범위를 극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일신안보조약을 일본 정부가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각주

1) 주한미군 2사단 2여단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디펜스 뉴스’는 “한국을 다른 임무를 위해 병력을 발진시키는 중심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 미군이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을 구축한다는 새 목표의 전조가 되는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연합뉴스,

2004. 6. 2) 이를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를 한국 국민과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로부터 직접 분쟁지역으로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일환이라는 것은 한층 분명해진다.

2) 문화일보 2005. 01. 07

3)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2003. 7) 한국 측 협상팀 사전 준비회의 문서. 이 문서는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 시나리오를 재난구호와 해양수색·구조 등의 저강도 투입, 분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유지·강화,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의 중강도 투입,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갈등 시 군사적 조정 등의 고강도 투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www.nanjoong.net에서 인용

4)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관리는 2004년 12월 6일 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한미군을 이동할 때 한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그 절차를 협의하는 단계다”라고 밝힌 바 있다.

5) 중앙일보 2005. 03. 07자

6) 한미 양국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예비회의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은 지역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으며, 1차 회의 등에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7) 1992년 제24차 SCM 결정에 따라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RAND 연구소가 한미동맹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를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1994년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논문은 한미동맹의 4가지 대안으로 견고한 한반도 방위동맹, 증원위주 안보동맹, 지역 안보동맹, 정치적 동맹을 들고 ‘견고한 한반도 방위동맹’에서 ‘과도기적 안보동맹’(한국 방위 위주, 부분적 지역안보 참여)을 거쳐 ‘지역 안보동맹’(한국 방위 지역안보 병행)으로 이행하는 것을 잠재적 위협과 장기적 기회를 고려한 균형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8) 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회의록(2003 .06. 04~05). 노회찬 의원 보도자료.

9) 미국은 2003년 10월 5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근거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한국의 양해를 요구했다.(중앙일보, 2004년. 1월 27일 자)

10)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3차 회의 한국 측 준비 자료. www.nanjoong.net에서 인용

11) 한국일보, 2004. 5. 26 자

12)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년 발행), 81 쪽.

13) 한미동맹의 장기적 전망을 민주적 가치에서 찾는 것은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주와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작전 범위를 사실상 세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이는 2기 부시정권이 주창하는 민주적 가치가 클린턴 정권의 군사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14)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의 영토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지리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5)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자위대의 국외 임무를 부수적 임무에서 방위 출동과 같은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내용의 신방위계획대강을 2004년 12월 채택하였으

며 자위대 항구 파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겨레, 2004. 12. 11 자

16) 2000년에 각각 발표된 ‘아시아 2025’나 ‘합참비전 2020’ 보고서는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있다.

17) 한겨레의 2005년 3월 28일 ‘인도 키워 중국 견제’ 기사 참조

18) 동아일보 2005. 3. 21 자

19) 일본은 미 육군 제 1군단 사령부의 자마 이전에 최종적으로 양해하였으며, 대신 미일 양국은 사령부의 작전범위를 ‘극동’으로 제한하고 사령부의 규모도 축소하기로 하였다. 한겨레 2005. 4. 14 자.

20) 국방부, 2000년 국방백서, 91~92쪽

21) 한일간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국민정서가 연합적 군사관계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2) 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1974년 12월 14일)의 제 3조는 “⑤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의 협정에 위반된 사용 또는 협정기간 만료 뒤의 주둔”, “⑥타국의 자유에 맡긴 자국 영역이 그 국가의 대 제3국 침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 “⑦상기한 중대한 무력행위를 하는 무장단, 집단, 비정규군 또는 용병이 국가에 의하여 또는 국가를 대리하여 타국에 파견되는 것, 혹은 국가의 실질적 관여” 등을 각각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3)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지역동맹으로 전환되면 지역 작전수행을 위한 광역사령부가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차영구, 폴락,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한국어 판) 59쪽, 1994년

24)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그 지휘체제가 각자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병렬형 지휘체제이지만 평시부터 ‘포괄적 메카니즘’과 ‘조정메카니즘’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조정소가 각 군별 및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어 내용적으로는 미군이 자위대를 지휘통제하는 대미 종속적 지휘체제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준비작전-초계, 정찰, 경계, 작전준비 등-의 경우 현재 이미 주일미군사령관의 통제가 승인되고 있고”, 전시에 “앞으로 발생한 일본 직접 방위를 위한 작전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미군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小泉親司, 일미군사동맹사연구, 신일본출판사, 2002년 발행, 120쪽)

25) 2004년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 성명은 2003년에 이어 재차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26)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이미 2002년 1월에 한반도 긴급 사태 시 다국적군의 지원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컴퓨터 도상 모의훈련(MPAT) 및 워크숍을 미·일·중·러·영 등 30여 개국 군 관계자 150여 명과 유엔 및 국제 적십자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이는 1999년에 수립된 ‘개념계획 5029’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 2001, 12월, 26일 자.

27) 국방일보, 2005년 3월 19일 보도. 영어원문은 다음과 같음. “Our desire for the future is to expand the roles of member nations and integrate them more fully in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Headquarters staff ; thereby, creating a truly multi-national staff focused on integrating the strengths of all fifteen-member nations into our contingency and operational planning and operations.”

28)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지휘권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부로 자동적으로

환원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 국방부 훈령 제237호(78.4.18)는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한국군 독자적인 체계에 의해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인택,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법문사, 24 쪽, 1996년.

29) 이 협정은 클린턴 정권의 요구로 1996년 4월 5일 처음 체결되었으며 적용분야로서 공동훈련, 유엔 PKO활동, 국제구원활동 등 3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30)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은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미국의 군사변환과 조화되도록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31) ‘협력적 자주국방’이 미래 위협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른바 ‘불특정 위협’은 방어활동의 범위를 기존의 북한에서 동북아시아 주변국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또 한국 정부는 비록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군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해외파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군의 정보화·기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32) 한미 양 당국은 제2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에서 “기타, 쓰나미 지진/해일 복구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한미간 협력 증진 등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임”이라고 하여 저장도 분쟁 개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결과 국방부 보도 자료, 2005. 4. 1. 또한 미군은 합참 교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평화유지, 평화강제, 대테러전과 같은 형태의 개입을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곧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33)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in and out’ 하는 문제는 (한미) 연합사령관의 권한 사항임. 그 과정에서 한국 합참의장과 협의할 것으로 기대함”. 차영구, 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회의록, 노회찬 의원 보도 자료, www.nanjoong.net에서 인용.

34) 미 국무부는 “2004 회계연도 업무 및 회계 평가 보고서” 중의 “한미관계의 지위”에서 한미 미래동맹 협상은 ‘목표를 달성(on target)’했으며, 특히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목표를 초과달성(above target)’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2004. 12. 21 자

서보강 (기자 / 중국 인민일보)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에 대해서 ‘한반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주한미군역할변경 과정은 한국 입장에서 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즉, 미국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자주국방을 건설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한국은 지금 교차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할 때 군사기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라크를 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치고 싶어도 기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한국 기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때 한국기지 이용을 불허하는게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한다든가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하는 그 전략은 제가 볼 때 전망이 없습니다. 중국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국에 비교할 수 없지만 13억 중국인은 동화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대만 독립 문제 등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때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연코 ‘NO’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다극화의 추세로 갑니다. 평화와 발전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뜻대로 패권형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세력으로 전쟁세력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요구입니다.

전봉근 (평화협력원 원장)

주한미군의 기동군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께서도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식의 일종의 지침같은 것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주한미군의 해외로의 군 동원에 대해 평화유지군으로 이용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기동타격대로 이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제가 볼때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와 동북아와 무관한 다른 지역에 개입할 경우를 구분해서,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있기 보다는 조금 유연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협의제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느냐, 또 막아야 된다고 했을 때 막을 힘이 있느냐,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등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학계에서나 관련 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의 위협이 사실상 축소된 마당에서 ‘현재와 같은 동맹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식의 문제제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대북방어에서 주한미군 주둔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북한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과 그리고 통일 과정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이 가장 우리에게 호의적이라는 점,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의 한-일, 혹은 한-중간의 미래의 갈등 가능성에서 우리의 입장강화를 위한 미국의 필요성 등을 생각할 때 아마 상당기간 동안 미국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할 때 저는 ‘한미동맹의 현상유지’도 문제점을 갖고 있고, ‘한미동맹의 폐기’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中间的의 어느 균형에서 우리 입장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전협의제 혹은 동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그런 식의 방식을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10년 내에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경우 연합지휘체계가 어찌면 일본, 유럽의 병렬식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연합전력이 미국이 우위에 서서 지휘를 하고 한국군은 지휘를 받는 식인데 일본이나 나토처럼 병렬식 체제로 가면 주한미군에 대한 통제력도 약간 강화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동맹방식은 우리에게 과연 좋은가. 일본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모델을 놓고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의 행동반경, 행동양식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합니다. 일본이 현재 여러 가지 지휘체제와 전시체제에 대

해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평통사에서 말씀하셨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불평등협정의 전면개정 혹은 재검토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이나 지역동맹화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해서 기형적인 한미연합사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을 산출하기 위한 민간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FOTA 회의에 이어서 SPI 회의도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외교안보정책의 비밀주의 - 전략적 유연성문제가 전혀 공론화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혹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 성격변화 문제, 향후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국민적인 토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년 동안 고착화 된 대미 종속의식이 아직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의 발제에서 나온 ‘한미동맹은 백해무익하다’는 주장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반시민들을 설득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할 때는 주한미군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것을 먼저 시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와 지원체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편익, 한국 측의 기회비용, 주한미군의 전력은 적정한가,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봉근 선생님이 “주한미군 주둔목적이 대북방어에서는 그 역할이 한층 줄어들었고 동북아에서 한국이 어떤 입지를 굳힐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은 왜 주둔하고 있는 지 그리고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왜 배제되는지 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교안보국방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도 이해가 안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 주둔 목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 중심주의 의사결정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을 산출하기 위한 민간 합동 평가위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한미당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또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했고 그를 위한 사업도 입안하고 있습니다.

‘아·태 기동군화’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방위조약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희 변호사님 발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11월 11일, 노회찬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볼 때 주한미군이 제3의 분쟁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라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을 때 처음에 윤 장관은 “주한미군이 우리하고 사전협의를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회찬의원이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조약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라고 다그쳐 묻자 윤 장관은 말을 바꾸어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제3의 분쟁지역으로 주한미군이 이동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모순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조약 2조와 4조에 의거하여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해도 사전협의를 의무화되어 있다고 보는 이정희 변호사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의무화되어 있다면 지금에 와서 한미당국이 새삼스럽게 사전협의절차를 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 지금까지 사전협의를 해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전협의를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망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1월 LA에 가서 발언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 공사졸업식을 통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을 보면 “‘아·태지역의 분쟁개입’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라크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이 없다면 우방으로서 O.K 한다는 뜻이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일정한 조건이나 제약을 가할 경우에는 조건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당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아·태 기동군화를 기만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이 매우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 위의 신부’ 문정현, 대추리 주민 된 사연

봄 햇살 눈부시던 3월의 마지막 날, ‘대추리 주민’ 문정현 신부와의 유쾌한 만남을 기대하며 무궁화호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 밖은 완연한 봄이다.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대추분교에 도착하니 황새울 벌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섭다. ‘평화바람’이 숙소로 쓰고 있는 집을 물어 물어 찾아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컴퓨터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 문정현 신부는 포토에세이 <평택 투쟁의 발자취> 작업으로 분주하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있다!’

문정현 신부는 반미운동 현장 뿐 아니라 반핵·생명·평화운동 현장 등 전국을 누비는 ‘길 위의 신부’다. 지난해 봄부터 문 신부는 유랑단 ‘평화바람’을 꾸려 ‘5·29 평화축제’를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문제점을 알렸다. 못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준 천성산 지울스님과 파병반대를 외치며 58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한 김재복 수사를 도울 방법을 찾다가 시작하게 된 ‘평화유랑’,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삼보일배’ 현장, 부안 핵 폐기장 건설반대 투쟁 현장에서 그는 늘 지역주민들 속에 있었다.

문정현 신부는 평화유랑의 길에서 만난 이들을 통해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음을 실감하고 ‘자주·생명·평화’를 위해 “무엇인가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가 애초 구상했던 2005년의 활동 계획은 일본, 필리핀, 태국 등 미군기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아시아 지역을 유랑하며 현지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자 문 신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평화유랑단과 함께 대추리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문 신부가 대추리 주민이 된 지도 어느새 두 달이 돼간다.

“집을 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고 이사 때도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이제는 주민들이 김치도 담가주시고 아주 아껴주십니다.” 이젠 손님이 아닌 대추리 주민의 일원으로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앞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대추리 주민이 된 이후 문 신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주민들과 함께 국방부의 지장물 조사를 막아낸 일을 손꼽았다. “70~80세의 노인들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모든 일손을 놓고 들판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지펴 놓고, 뽕뽕 언 밥을 먹으면서 국방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그리고 평택경찰과 시청 직원들을 몰아냈지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안 핵 폐기장과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투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문 신부는 평택 투쟁에 대해서도 “이른바 ‘국책사업’이 보이는 양상은 늘 똑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의사 무시하는 것. 주민들이 듣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붙이죠. 새만금이나 핵폐기장 투쟁에서 정부는 엄청난 물리력으로 주민을 꺾으려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번 평택투쟁도 어디 하나 합리적인 대목이 없어요. 주민들의 각오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무리 큰 물리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문 신부는 정부가 아무리 ‘국책사업’을 앞세워 주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으려 해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 ‘땅’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아픈 기억이다.

‘저게 우리 동네였다고... 저기에는 언덕이 있었고 방죽과 우물이 있었고,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고... 그 위에 아카시아나무, 살구나무, 감나무가 서 있던 제법 큰 집들도 있었고...그런데 어느 날 미군기지가 들어온다고 땅차(불도저)로 다 밀어 방죽을 메우고 활주로를 만들었지....’

대추리 노인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 문 신부가 평택문제에 무관심한 언론에게 쓴 소리를 한다. “지금 언론이 아무 데도 (평택에) 오질 않아요. 한미간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나본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분들 앞에 그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직자에서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되기까지

‘길 위의 신부’로 불리는 문 신부는 오늘도 여전히 반미투쟁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 무엇이 철순을 앞둔 노신부를 길로 나서게 만드는 힘일까. “신부의 역할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군산 광활한 미군기지 앞에서 한미간의 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깨닫게 됐고, 매항리, 맥팔랜드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파주 스토리 사격장, 다그마노스 사격장, 전동록, 미선이·효순이 문제 등 미군으로 인한 불평등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해 온 것뿐이죠. 한미 관계를 옹계, 깊이 생각하고 자주와 평화와 생명의 길에 서 있다보니 여기 대추리까지 와서 살게 됐습니다.”

늘 젊은이들의 지혜를 빌어서 산다는 문 신부. “나는 무슨 일을 창작해서 만들기보다 주변을 보고 ‘아~ 저게 옳은 길이다’했을 때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 때에는 바로 또 다른 것을 찾아야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참 고통스러운 곳이다’했을 때 같이 있는 힘. 그것으로 살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신부는 또한 전북 익산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아들을 모아 ‘작은 자매의 집’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돌보고 있다. 전북과 평택을 오가는 일이 쉽지 않으려면 ‘작은 자매의 집’ 얘기에 문 신부 얼굴이 밝아진다.

“내가 없으면 안돌아가는 집이죠. 운동권에 대한 마음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마음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착’ 여기에서 시작돼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가는 것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 동정

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 있기에 다가가고 얘기를 듣고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을 재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매의 집이 이뤄진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입증이 됩니다. 살만큼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도둑질 하는 것을 보면 그렇고 또 남 못 가진 것 갖고 살아도 가정불화라든가 이웃과 격리 돼서 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인간적인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상부상조하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다가가서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우정이 얼마나 아쉬운 세상입니까? 이러한 우정이 자라고 자랐을 때 정말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사는 자리가 다르고 시기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공통분모는 사람에 대한 애정, 특히 고통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 노동자 농민처럼 소외된 사람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돼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문 신부가 ‘평화누리 통일누리’ 독자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이다.

글·사진 | 김현진

'길 위의 신부' 문정현. 그는 반미·자주, 생명·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추리 마을 입구에 세워진 '미군막기대장부'와 '땅지킴여장부' 옆에 선 문정현 신부. 대추리 주민들에게 문 신부는 어찌면 저 장승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부의 삶이라는 문정현 신부는 이 곳 평택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한다.

| 인터뷰 |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2주년을 규탄하는 집회장에 호리호리한 몸매의 일본여성이 낭랑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였다. ‘주일미군의 재배치와 미일동맹의 강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그녀의 연설 주제가 평통사의 주요활동내용과 연관이 있기에 무작정 다가가 서툰 영어로 연설문을 요청하였다. 메모가 잔뜩 쓰여진 연설문에 서로 난감해하다가, ‘기왕이면 직접 얘기를 듣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평통사 방문을 제의했다. 제의에 선뜻 응한 그녀는 다음날인 21일 평통사 사무실을 방문했고, 홍근수상임대표와 미군 문제팀 오혜란 국장(인천평통사 공동대표 겸임)과 함께 한 대담이 이뤄졌다.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를 모색하는 ‘카사하라 히카루’

▶히카루씨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People's Plan Study Group)와 주요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PPSG는 상임대표인 무토(75세) 선생을 중심으로 1998년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PPSG는 평화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연결하고, 이론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회원들도 학자나 이론가들이 많죠. 미군기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민이나 인종 문제 등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일본어 잡지를 발행하고, 1년에 2번은 영어잡지(People's Plan Japanesia)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PPSG는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기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지도(mapping)’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일미군 문제는 한 지역 안의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오키나와나 히로시마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활동가라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로시마나 오키나와가 같은 일을 하지만, 유대관계가 깊지는 않습니다. 두 지역의 내용적·조직적 유대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또한 미군기지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다른 나라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전망을 내오는 일, 다른 나라의 단체들과 연결고리를 찾고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의 활동가를 지원하려는 것이죠.

▶주일미군 재배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주일미군의 재배치는 오키나와의 헤노코 지역이 핫이슈입니다. 일-미 양국은 1996년에 후텐마 공군기지를 반환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후텐마 공군기지 인근 대학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지는 모두 위험합니다.

미일 양국은 후텐마 공군기지를 헤노코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처지와 비슷하죠.

헤노코 지역에서는 미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노코 지역 사람들은 해안가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며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다위에 시추탑을 만들어 하루종일 지키면서 기지건설 반대 시위를 합

니다. 매우 인상적인 활동이죠. 카누, 보트, 배를 이용한 해상 시위도 자주 벌입니다. 또한 도쿄에 있는 활동가들은 매주 월요일 방위청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헤노코 지역의 공군기지건설은 또한 환경파괴로 이어집니다. 듀공(오키나와에 서식하는 바다소의 일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듀공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예요. 얼마 전 그린피스가 헤노코지역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번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 평화 대회에서는 헤노코 주민들에 대한 연대를 표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신방위대강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은 북을 겨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보통 국가’가 되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민중들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만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점점 일체화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시모지 공항은 민간공항입니다. 그런데,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지역으로의 이전이 많은 저항에 부딪히자 일-미 양국은 시모지 공항을 두 번째 대안으로 생각하고, 주일미군이 공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큐슈, 홋카이도 지역의 기지도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후인 기지의 경우도 그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은 자체의 공군기지를 가지는 대신 자위대가 사용하는 기지를 같이 쓰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미군기지만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것이 평화헌법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많은 NGO들이 주일미군의 재배치와 일미동맹의 강화에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단체와 나라 사이의 교류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 정도 후에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평통사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성격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재배치와 주한미군재배치가 밀접한 연관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단체에 제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활동가들의 연대와 만남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특히 평택주민들이 헤노코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평택의 상황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평택 주민들과 헤노코 주민들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워야 합니다. 역동적이고, 열기넘치는 한국의 평화운동 방식은 일본에 꼭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많은 자료를 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 서로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끝난 이후에는 카사하라씨가 궁금해 하는 한미간의 연합군사훈련(독수리 훈련과

RSOI 훈련)과 한미간의 군사지휘체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미군 재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평화운동(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평화누리 통일누리]와 [People's Plan Japonesia]의 내용 교류를 약속하였다.

정리 | 오미정

이라크 파병반대 양심선언 이 등 병

강 철 민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반대 양심선언 후 옥살이를 하고 나온 강철민 이병의 지금의 심경을 신는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양심선언과 농성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냐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 있는 투쟁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옥살이를 해도 전혀 후회가 없을 것 같았고 옳은 일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농민회 형님이나 한총련 대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제가 그런 분들처럼은 살지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싶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 같은 것이 아홉이고 다른 것이 하나인 사람들이 모여, 같은 아홉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미동맹 파기’만이 진정한 민족군대로 되는 길

복역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분에 넘치는 관심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사회에서의 군대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한국군대의 전시 작전권은 한국에 없습니다. 말이 좋아 한미연합사에 있다는 것이지 사실 미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는 무관하게 분단된 상황에서 그 총부리는 한 민족인 북을 향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무장 군대가 한국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친일잔재의 청산은 더욱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한국군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의 군대는 군사독재의 수족 역할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독재의 수족이라 하면 월남전의 총알받이나 광주민주항쟁에서의 계엄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한국군대는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로서의 올바른 군대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징병제’라는 법적 처벌을 명시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군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포장한 채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군대는 자주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침략의 도구, 용병과 같은 총알받이가 아니라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분단을 불러왔고 미국에 의해서 월남전의 총알받이가 되었고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침략의 도구로 한국군은 쓰여졌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대가 한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미국의

한국주둔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한미 SOFA를 폐기해야 하며 한미동맹 또한 파기시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민족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라크 침략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이라크 민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김선일씨가 죽었습니다. 또한 한국군대는 물론 한반도가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데 한국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침략전쟁을 반대하지는 못할망정 올바르게 못한 한미동맹을 파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얄팍한 속임수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내몰고 한민족인 북을 공격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총알받이 한국군대를 이라크에서 철군시켜야 합니다.

힘과 깨달음을 준 건 바로 사람

1년 3개월의 복역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주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 다른 많은 사람이 도와주기에 삶을 잘 살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1년 3개월의 복역생활은 이러한 생각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역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몸이 힘들어서라기 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였습니다. 육군교도소에 있을 때 징벌을 받아 한달을 혼자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한달을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있으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반가운 것이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가 고파 밥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반가워 기다린 것입니다. 밥맛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사람이 참 중요하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주 아주 큰 것을 얻었지요. 저에게 힘을 준 것도 사람이고 깨달음을 준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침략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의 정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 끝나고 억울하게 총알받이로 가 있는 한국군대가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합니다. 이제 학생신분으로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농활참가기

평택 땅에 발을 담그고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주 무 너

어딘가로 떠나고픈 봄날이다.

내 어깨에는 큰 가방과 침낭이 우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어디가?”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평택농활가요~!”라고 답하는 나의 목소리가 신나고 자랑스롭다. 학교에서의 취재를 급히 끝내고 대전역으로 향해 앞으로!

기차로 1시간 남짓. 평택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때가 늦은 관계로 택시를 타야했다. 농활 장소인 대추리에 들어서자 운전사아저씨는 “여기까지 썩~ 미군기지가 된대요” 라며 이곳 소식을 전하신다. 내 눈 앞에 펼쳐진 들판을 가진 조용한 시골마을이 미군기지가 될 거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가질 않는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식구들은 현재 평택의 상황과 앞으로 펼쳐나갈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농활을 함께할 사람들과의 떨리는(?) 첫 만남이었다. 유영재팀장님이 먼저 “우린 세 번째 보죠?”라며 인사를 건네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촌향기가 듬뿍 나는 아저씨께서 들어 오신다. 대추리 이장이신 김지태 팽성대책위원장님이셨다. “내일 평통사본부는 다 죽었다고 하던데…….”라는 농활대원의 말에 “일 쉬워요, 피부릴 사람 대비해서 미리 장화 사다놔지요” 하면서 씩 웃으시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하며 웃는다.

둘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모판 나르기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주황색 물장화를 신고 트럭에 올라타 오늘을 시작한다. 트럭에 쌓인 모판을 눈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 일의 전부다. 하지만 쉽게 볼 일이 아니다. 모판이 8천개란다. 트럭에서부터 길-논둑-도랑-또 논둑-논으로 쪽 늘어서서 모판을 전하는데, 자리한 위치에 따라 허리의 숙임과 회전 각도를 다양하게 구사해야한다. 모판을 전하는 손놀림에서 농활의 열기가 보인다. 논흙에 푹푹 빠지는 느낌도 한 재미가 되어준다. 그렇게 오전의 일을 다 끝내고 점심시간! 일을 한 뒤 마당에 둘러앉아 찌개를 먹는 기분이란 정말! ^^ 몸에 배인 적절한(?) 논내음이 밥맛을 더해준다.

배도 두둑이 채웠겠다 다시 일터로 간다. 모두들 체법 일이 몸에 익은 듯하다. 땀이 난 뒤의 기분을 만끽해야 하는데 바람이 불어 모자만 날린다. 나름대로는 ‘바람이 왜 이렇게 부나’했는데, 저녁 집회 때 사회자의 말에 따르면 “오늘은 농활 왔다고 바람이 안 분 날씨”라고 했다. 누군가 “평택의 바람은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를 들으니 50년 전 미군에게 평택 땅을 빼앗기고 마을사람들이 바다를 직접 간척했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그렇게 만든 땅이기에 우리가 더 소중히 해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 분들은 매일 1시간씩 저녁집회를 가진단다. 이날로 228일째 모임을 지속해왔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일하고, 하루 집회에 참가하고도 이렇게 몸이 쭈시는데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어떨까? 참 대단하게 느껴진다.

한창 일하고 신나게 촛불집회를 열고났더니 이날 밤은 몸이 방바닥에 널브러뜨려진다.

셋째날, 빠근한 몸을 깨우고 아침밥을 한다. 하루가 지나고나니 ‘빠 빠지게 일 한다’는 말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이날은 도움의 손길이 와서 한결 여유롭다. 남은 모판을 마저 나르고 덤으로 몇백판 쯤 더 담아 날랐다.

평택에 농활 왔던 모든 사람들과 마을 주민과의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노무현정권 규탄대회를 끝으로 농활은 막을 내렸다. 마지막에 미군기지 철장 앞에서 전경과 대립한 것까지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일과 생각들이 있었다. 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는 도전을 받았다. 평택농활로 엮인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에 고마움을 느끼며, 이 많은 배움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에 잠긴다.

일하는 내내 들렸던 “뭐야 뭐야 뭐야~”라는 노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린다.

포토

평택 못자리 농활

"평택 범국민 농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농활에 들어가기 앞서 주황색 장화를 맞춰 신은 평통사 대원들이 힘찬 걸의를 밝히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영차~ 모판을 놓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범씨를 쌀로 키워주는 논의 흙은 아주 여리고 부드럽기 때문이지요.

다른 논으로 이동할 때는 트럭을 타기도 하고,

이처럼 경운기를 타기도 했습니다.

점심으로 곱창전골이 아주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처음 농활에 참가한 인천공대 05학번 새내기들에게 밥맛은 꿀맛이었습니다. 신대4리 박갑순 이장님도 살짝~

평통사는 이 곳 주민들에게 나눠드릴 집모양 문패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집입니다" 문패를 달아드리자 주민들은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농활이 모두 끝나고 작업할 때 신었던 장화들은 모두 깨끗하게 닦여 가지런히 놓여졌습니다. 다음 농활을 기약하며 말이죠.

‘작전계획 5029’ 강요하는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반환하라! >>>>

지난 18일. 평통사, 평화통일시민연대, 통일연대, 민중연대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침공계획

(작전계획 5029-05) 강요하는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작전계획 5029-05를 한국정부에게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자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소장은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한미연합사령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미군의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들의 저지로 길이 막혔습니다.

대표단이 항의서한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대북침공계획을 세운 한미연합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하고,

우리의 주권 행사를 위해

작전통제권은 반드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평화카페

희망없는 현실속에서 생명을 키우는 아이들의 삶의 방정식
“아무도 모른다”

글 | 김균열 (향린교회 교인, 웰젠 프로덕션 대표)

엄마가 홀연히 집을 떠나고 12살 먹은 아키라(야기라 유아 분)가 어린 세 동생을 데리고 좁은 아파트에서 6개월 넘게 살아간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담은 이 영화는 감독 고레가와 히로카즈의 전작들에서 다뤘던 얘기들처럼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다. 감독은 15년 전 당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나시 스가모’사건을 픽션화 했다. 감독에게 있어서 15년의 기다림은 무엇일까? 감독은 영화적 재구성을 통해 뭘 말하려고 했을까?

두 칸짜리 아파트에 이사 온 ‘유’(엄마, 케이코 분)가 그녀의 네 아이들에게 두 가지 규칙을 설명한다. ‘떠들지 말 것’과 ‘밖에 나가지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엄마는 곧 집을 나가고 만다. 크리스마스 때 돌아올 거란 말과 함께...

그때부터 그들의 갇혀진 공간인 아파트는 기다림의 공간이자 생존의 공간이 된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방식은 독특하다. 배경이 된 사건 때문에 결말을 대충 알고 있는 독자들의 우려와 걱정엔 아랑곳없이 그들은 너무도 태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인다. 실제 사건을 픽션화 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표정과 삶에서 어른들과 똑같은 절망감을 읽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기엔 아이들의 연기와 설정이 너무도 사실적이다. 적어도 극의 중반을 넘어서기 전까진, 아이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들만의 기다림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생존의 방식을 취한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생존은 ‘내일 죽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생존은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다 생긴 생활비도, 끊겨버린 전기세를 내기 보다는 사랑스런 막내 유키(시즈미 모모코 분)의 ‘아폴로 초코’를 사는데 써버리고, 긴박해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컵라면 용기를 화분 삼아 생명을 키워가는 여유가 있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만의 눈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카메라는 시종 아무런 감정의 가감 없이 그들을 잡는다. 지루하리만치 긴 롱테이크의 폴샷에 간간이 섞여 나오는 아이들의 얼굴 클로즈 샷(주1)... 거기에 일본 영화 특유의 다다미 샷(주2)에 지쳐 누워있는 교코(둘째, 기타우라 아유 분)의 땀 배인 얼굴 클로즈 샷,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바깥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토끼발을 하고 선 유키의 발 클로즈샷, 세상으로 뛰어나가기 위해 신발장의 신발들을 현관 앞에 꺼내 놓는 클로즈 샷... 등등 인상 깊은 클로즈 샷 앵글이 있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관조적이다.

영화는 기성영화면 고려했을 법한 미장센(주3)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에 인색하다. 조명은 주로 자연광에 의지 했고 스킨톤의 색온도는 제각기라서 거칠다 못해 아마추어적(주4)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신인 배우들의 해맑은 미소와 2004년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에 빛나

는 야기라 유아의 무표정하면서도 오묘한 표정 연기를 포착해 내려면 어쩔 수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카메라는 또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었던 ‘버린 엄마’와 ‘무관심한 이웃’에게 어떤 감정의 가감도 없이 다가간다. 그럼으로써 카메라는 기성영화에서 즐기는 ‘시선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감독 고레가와 히로카즈는 영화의 배경이 된 ‘나시 스가모’사건이 있는 후 15년이 지나서야 이 영화를 만든다. 제작기간 또한 다른 영화의 세 배가 되는 1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쳤고 배우는 사키역을 맡은 배우가 잠시 다른 영화에 출연한 것 빼곤 모두 신인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감독은 촬영에 앞서 신인배우인 아이들과 놀면서 충분히 그들의 기호나 생활 습성 등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고 반복되는 테이크(주5) 중 가장 좋은 테이크를 골라낼 수 있도록 각각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도 있었다.

극중 계절의 변화에 맞게, 한 시즌 동안 촬영하고 편집을 한 후 다음 시즌 시나리오를 쓴 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기도 했다. 결국 이런 디테일한 감독의 배려가 없었다면 어른들이 만든, 어른이 보는, 단지 애들이 출연만 하는 영화를 그것도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왜 들추고 꺼내냈는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고레가와 히로카즈 감독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아이들을 껴안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껴안는다는 것은 서로가 반대편을 쳐다보기 마련인데, 단지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 애기에 대한 해답은 카메라의 시선을 스스로 낮춤으로서, 시선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각주

주1) 대체로 긴 호흡의 편집 리듬을 갖는 영화에선 Full Shot의 컷 위주로 길게 편집을 가져가지만 이 영화에선 간간이 아이들의 얼굴 Close shot을 섞어 리듬감을 주고 있다.

주2) 서양에서 들어온 영화 제작 방식은 그들 기준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카메라의 높이도 소파나 침대에서 생활하는 그네들의 생활 습관에 맞춰 눈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제작 습관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일본에선 그들의 주거 공간인 다다미위에서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만의 독특한 눈높이 앵글을 만들어낸 것이 다다미 shot.

주3) 미장센 (Mise-en-Scene) 화면의 미적 구성 - 프레임안의 피사체와 카메라 프레임을 적절히 조절하여 미적으로 구성해보고자 하는 시도

주4) 우리 눈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훌륭한 자동 기능이 있다. 사물이 자신의 색을 갖는 것은 빛으로부터 오는 색 중에서 자신의 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색은 다 흡수해서인데 그 색은 빛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피부색도 마찬가지인데 영화를 만들 때 우린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촬영된, 따라서 각각 다른 빛의 성질 조건에 따라 촬영된 피부색을 통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을 편집 전에 후반작업에서 맞춰 주기도 하지만 촬영 작업에서부터 그것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선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런 인위적인 작업을 고려하지 않았다.

주5) 영화는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할 수 있다. NG가 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좀더 좋은 Shot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첫 번째 촬영된 Shot을 첫 번째 Take라 하고 두 번째 촬영된 Shot은 두 번째 Take라 한다.